

금년은, 국민소득 1만불 돌파와 OECD 가입 추진 등을 계기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는

제고할 방침이다. 첨단 환경 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한반도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등 점증하는 새

스모그 없는 상쾌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6년에 약 100만톤의 일반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시키는 시책 등을 통하여 산업·발전·난방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8만톤 정도 줄이는 한편, 매연여과장치 부착과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도 약 7만톤 가량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의 '9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환경부 제공) 글 / 편집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96년도 환경시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일상생활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기업과 민간단체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환경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규제는 강화하되, 절차적 규제는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제 등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또한 환경개선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을 정착시키고, 수혜자부담원칙과 상호연계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1.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

환경부는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우선 대도시 스모그를 집중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수도 서울의 연간 스모그 발생일수는 약 50일인데, 이를 45일정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표면적으로는 발생일수 몇 일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날이 증가해 가는 자동차와 연료 사용량의 증가를 감안할 때 대기 수준의 현상유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목표치의 달성 자체는 매우 벅찬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스모그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산업부문 및 가정연료

지난해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해온 오존오염경보제는 금년에 인천지역에까지 확대 실시되며, '97년부터는 6대도시로 확대함과 아울러 예보제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지하상가·지하철역·백화점등 대규모 지하나 실내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1세기 환경비전』에서 환경부가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지상에서의 대기질 못지 않게 하루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나 실내 건물에서 공기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긴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 및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에서는 지하철

역·백화점등의 공기질 측정, 환기 시설 설치, 유해물질 발생 건축자재 사용규제, 환기시설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며,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96.3월 연구용역(2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9~10월 전국의 읍·면·동당 1명씩 3,229명의 표본을 선정하여 수도물에 대한 음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물을 그냥 먹는 인구는 불과 8.7%였으며,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84.9%, 먹는 샘물이나 약수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6.4%로 나타나 수도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함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여하히 해소하느냐는 환경정책의 신뢰성 회복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를 핵심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민간수질전문가와 공동으로 년2회씩 수도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시설은 철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은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년부터는 전국 613개 정수장에 대한 연차적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완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수도물 수질기준은 WHO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관리항목수가 미흡하지만, 현재 43개 항목을 금년중 5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점차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의 동천, 광주의 광주천, 대전의 갑

천 등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은 대부분 자정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악취를 발생하는 등 하수천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호강 등 전국 46개 하천에 지방양여금 326억원을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차원에서도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천의 녹조와 해양의 적조를 발생시키는 질소·인을 규제하고, 하천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규제도 시행한다. 청정지역은 규제기준이 가장 엄격(Ⅰ등급)한 지역인데 현재 전국의 29%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을 42%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는, 획일적인 쓰레기 수수료 부담 대신 각자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국민의 소비행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바 있다. 아직 주민불편사항등 일부 미비점이 남아 있으므로 신속히 개선·보완하는 한편, 생활개혁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불법투기 등 과거의 그릇된 타성에는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해 나가고, 대국민 청소행정서비스는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바꾸는 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종량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하나는 갑자기 급증하게 된 재활용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재활용품의 처리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나갈 방침이다. 조용한 생활

환경의 확보는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이지만, 특히 학교·도서관등 정온이 요구되는 지역에서의 소음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굴삭기·항타기등 고소음 기계류 8종에 대하여는 소음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주기적인 오염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우리 환경질의 총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수질·폐기물등 단편적인 환경질이나, BOD, COD, ppm이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감환경지수를 개발하고, 환경지도에 나타내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수질지표생물을 통해 하천의 물 맑기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예컨대, 옆새우·강도래가 발견되면 1급수, 날도래·하루살이 유충이 발견되면 2급수)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대기오염이 우심한 지역에는 대기오염과 상관관계가 큰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공기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민간차원에서도 환경스트레스지수(Environmental Stress Index, 미국 ZPG 개발), 녹색도시지수(Green Cities Index, 미국 Rutgers 대학 Susan Cutter 교수가 개발)등 다양한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97년부터 시행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21세기 환경비

전』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비롯, 대기·수질·폐기물 등 각 분야별 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투자계획 및 시책사업을 구체화하여 체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2. 하천의 수질개선 및 넉넉한 상수원수의 확보

하천 수질개선 및 넉넉한 상수원수의 확보는 여전히 환경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97년까지 총 15조 9천억원을 투자하는 대책이 집행되고 있으며, '96년중 환경부 소관으로 1조 3,14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62개소등 환경기초시설 268개소를 신·증설함으로써 현재의 하수처리율 45%를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오는 '97년이면, 기초시설의 설치 못지 않게 설치된 시설의 적정운영관리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환경부는 민간전문기관에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시킴으로써 처리효율의 향상과 운영비 절감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6년에는 우선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전국 383개소)은 가장 엄격한 행위규제가 가하여 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보호구역내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

아 왔다. 특히, 하류지역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등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혜지역 수도사업자의 출연금(70%)과 국고보조금(30%)을 재원으로 '96년부터 처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194억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시추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굴착업 등록제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폐공 발생에 대비, 폐공 예치금제를 도입하여 폐공에 대한 되메우기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깨끗한 상수원수의 확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표류수가 오염되어 가는 오늘날 그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수질오염사고가 잦고,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수질개선이 곤란한 낙동강 하류 부산·경남 지역에서 표류수 취수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금년에는 4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시추작업을 실시하고 하루 1만톤 규모의 취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국고 25억원). 영산강 하류 지역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식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의 협조로 합천댐 하류 황강에서 하루 100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광역상수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96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여 '98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며(총사업비 3,375억원), 완공되면 마산·창원등 경남 주요 도시의 용수수요가 100% 깨끗한 물로 대체되고, 부산에도 50만톤을 공급하게 된다.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6년중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 건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수질개선이 어려운 4대강 하류 18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89억원을 투자하여 17개소를 건설하고 그중 동두천·원주·진해등 8개소를 완공하게 된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노후 수도관2,591km를 교체, 취·정수장 86개소를 개량하며, 수질검사장비 85대를 추가 도입한다(2,600억원). 수질의 안전성 확보 못지 않게 수량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광역상수도(국고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시·읍)의 상수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1개 지역에서 사업비의 50%를 국고융자(300억원)하는 한편, 농특세로 추진하는 면단위 농어촌의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6개 지역에서 400억원을 지원한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마련은 범정부차원의 과제가 되고 있다.환경부는 금년도에 우선 극심한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도서지역 만이라도 가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심 도서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인근 도서에 상시 운반 급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해양환경관리체계의 개선

환경부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해양오염사고 및 적조 등으로 해양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96.2)하여 해양보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체계적인 해양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안해역의 적조방지를 위해 해수면 위주 관리에서 해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까지 포함시키고, 오염유발시설 설치제한과 오염물질배출의 총량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방식을 개선할 것이다.

퇴적오염물질 준설사업과 "푸른바다 가꾸기 청운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오염우심해역 준설사업과 어장정화사업 실시하는 한편 해양 유류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조선의 전용항로를 설정하고, 일정규모 이상 유조선 접안시 방제선 운항 등을 의무화하고 초동방제기능 강화를 위해 방제인력 및 장비를 보강, 민간방제업 신설 및 긴급방제자금을 설치운용('96년 100억원) 등 해양 유류오염사고 예방 및 조기방제기

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양환경조사의 과학화·체계화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양환경조사선(해양환경 1호)을 운영하여 해양오염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적조 원인규명 방지기술 및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체제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4. 폐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의 안전처리

폐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의 안전처리는 대량소비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 해결과제중의 하나이다. 가장 바람직한 폐기물 관리 방법은 첫째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Waste minimization)하고, 둘째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회수(resource recovery)하는 것이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의 최종처리방법에 속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만들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량목표를 설정·추진하는 『폐기물 감량 목표제』를 도입·시행한다. 이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마련('96. 6)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유도하고 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감량화를 위해

TV, 냉장고 등 6개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자에게 부여된 감량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종이금속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 기 설정된 폐자원 사용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과 자동차가전제품 등 재활용 촉진 대상품목은 생산시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와 재질로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서 폐자원 사용률 제고로 자원재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상응하도록 예치금부담금 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구축과 재활용품 처리 기반 확충 및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 추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집단 민원의 해소, 과학적 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등의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광역매립지 16개소의 설치비 50%인 250억원을 보조하는 한편 소각시설 13개소에 대해 사업비 30%인 191억원을 용자 지원하고 전국 136개 지역별로 15억원씩 보조, 2004년까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올해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 43개소에 대하여 '97년까지 소형소각시설 설치자금 50%를 '96년 18개소에 대해 24억원을 용자 지원할 방침이다.

**5. 대도시 및 공단지역
대기오염의 점진적 개선**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총량 삭감관리하기 위해 매연여과장치의 성능업증을 위한 실차시험을 완료하고, 서울의 시내버스와 청소차량 등 3,500대에 부착(50억원 용자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학·연 합동으로 저공해 핵심기술의 공동개발을 추진(국고 10억원 지원)하고 초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관계법(고압가스관리법 등) 개정 및 충전소 3개소 설치, 그리고 초저공해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지역 68개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B-C유를 LNG로 대체 (총 749개 단지중 622개 대체 완료)하고, 저황 B-C유의 황함량을 1.6%에서 1.0%로 강화하여 14개 시·군에 확대(총 36개) 공급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618개소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1,800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위한 기술지침을 강화('96.4)하는 한편 각종 대기오염원에 대한 종합센서스를 실시 ('96.5)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더

불어 대기환경규제지역 시범 지정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시범 지정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오염배출량 삭감계획을 포함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실천계획을 승인·평가 및 지원할 것이다. 울산·온산지역에 대한 지역총량규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업소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수립('96.1)하고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1단계 삭감(전체 배출량의 53%)을 위한 저황유 공급(1.0% → 0.3%, '96.7월부터)과 배연탈황시설 설치 등 업소별 삭감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및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 타지역으로의 확대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공동조사를 위해 한·중·일 인접국 상호간의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상황에 대한 본격 조사하고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4회)하여 협의, 항공기 및 지상관측을 통한 오염물질의 입체적 분포를 조사,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활용할 계획이다.

6.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중요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이

를 위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철원평야 등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610제곱킬로미터)하는 등 비무장지대의 인접지역 보호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강화도 북부, 득량만, 울산 무제치늪 등 주요 습지에 대한 정밀 조사 실시하여 서해안, 한강하구, 서남해안의 주요갯벌 생태계 조사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습지보호를 위한 정밀조사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생태관광(Ecotourism)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갈등 조정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훼손된 국토환경의 치유·복원을 위해서는 도로건설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야생생물 이동통로를 시범 설치하고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으로서 인위적 훼손에 의해 급속히 택지화되어 가고 있는 대암산 용늪 복원사업 시행하는 등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네트워크"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보급할 방침이다.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절약·자원재순환이 극대화되는, 21세기형 생태도시조성으로 5-6개의 생태도시 모형 및 설계지침을 개발하고, 각 도시별로 지역 특성에 맞

는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양의 유지관리

생태적으로 건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위해 토양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는 토양측정망을 국가망·지역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측정항목을 카드뮴 등 6개 항목외에 유류 등 5개 항목을 추가('96.1)할 계획이며,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여 오염방지조치 의무화와 정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지, 축사 등 비지정유발시설의 실태를 조사, 토양측정망에 포함시키거나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군부대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오염유형별로 60개 군부대를 선정, 국방부와 합동으로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군부대 중장기 환경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산지역의 경우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토양오염 방지 및 오염토양 복원 등을 목표로 휴·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토양오염 방지 사업을 추진키 위해 '96년중 대구

달성, 영덕 서정, 밀양 구운동 등 3개 광산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염된 토양의 복원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도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토양복원 기술을 분석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복원 및 정화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토양중 농약 잔류량에 대한 공정시험방법 및 잔류허용기준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8.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강화 및 위해성 저감

산업의 고도화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증가와 환경독성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96.4)하고 있으며 독성자료없이 유통되는 3만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키 위해 선진화된 유해성 평가방법(SAR)도 활용할 것이다. OECD 가입 등에 대비하여서는 선진국 수준의 독성시험 연구기관(GLP 시험기관)을 육성하고 유해성 심사에 잔류성·축적성 등을 추가, OECD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독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잔류성, 축적성이 높아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을 "감시 물질"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소키 위한 대책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 제한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유해성이 문제되는 물질은 사용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도(TRI)를 도입하고, 환경독성을 고려한 배출규제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체계 구축으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토대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유독물업소의 자체 방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9.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을 육성키 위해 사전오염 예방차원의 환경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제3세대 환경기술인 "환경복원 및 재생 기술"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과제를 대폭 발굴하는 한편, 국내 환경문제의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수출 가능성이 큰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 추진해 온 G7 프로젝

	계	'95까지	96	'97-2001
계	4,315	938	412	2,965
정 부	2,495	421	227	1,847
민 간	1,820	517	185	1,118

(표 1) G7 프로젝트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트를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도권 매립지 제2-1공구에 국제적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92-2001년까지 총 1,489억원 투자, 10개 기관 입주, 24만평)하고 분산관리되고 있는 30여종의 환경산업체를 통합관리하는 것과 같이하여 국제환경산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현실화('96.3)할 계획을 갖고 있다.('95년 610억, 업체당 2억원 → '96년 946억, 업체당 3-4억원)

10. 지구환경보전 및 한반도 환경협력 증진

국제적으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에 따라 환경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산하 무역환경위원회(WTO/CTE) 등에서의 논의쟁점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노력에 적극 동참·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 지역의 환경 협력을 주도하고 OECD, UNEP 등 국제 기구와의 환경협력을 통해 국제 기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OECD 환경정책위원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의 환경정책과 입장을 설명하는 등 환경분야에 있어서 OECD 가입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고 UNEP의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통한 연안 및 해양 환경의 통합관리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11. 녹색 시장환경운동의 지속적 확산

녹색 시장환경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의 활성화 및 각종위원회에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환경정보지, HITEL 등을 활용하여 환경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여건이 취약한 민간환경단체에 대하여 과도기적으로 국고보조 및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재정확충을 통한 기금지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다. 환경부는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지역별 소모임 제도를 통한 오염행위감시체제 구축 및 지역환경의 모니터제를 실시하는 것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과 명예환경감시원과의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환경자원봉사제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환경보전 생활화”의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환경교육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96.8)하고 학교환경교육의 지원도 강화키 위해 중·고교에 환경과목 선택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대학교 환경교육(교양과목)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환경교사 양성 및 연수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보전 시범학교의 우수운영 사례를 발굴확산('96 하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민간단체의 “시장환경 강화”에 대한 지원확대 및 환경교육강사요원에 대한 특별교육·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우수환경도서를 선정·시상하는 등 환경관련 도서출판에도 그 활성화('96.6)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보전 생활화” 홍보를 추진키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수시홍보 및 대상별·매체별 홍보전략을 개발·시행하고 “환경의 날”, “지구의 날”, “물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일을 계기로 각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96 상반기)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를 도모키 위해 학교, 가정, 사업장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실천 항목을 선정,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 제작·보급(지참형, 부착형)도 계획하고 있다.